

산업부 블랙리스트... 서해 공무원... '신구권력' 갈등 재점화

尹정부, 서해 공무원 사건 등 감사 민주당 "정치보복" 강하게 반발 대통령실 "특정 정치적 의도 아냐"

윤석열 정부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간 '신구권력'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 당시 논란이 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 결과도 2년여 만에 전 정부의 판단을 뒤집는 판단과 함께 감사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고 맞받으면서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과 야당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민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우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것도 신구권력의 충돌과 함께 전선도 더 넓어지는 모양새다.

장관급인 이들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관례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두 위원장이 새 정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으면서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까지 더해지며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법률이 정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18일) 'ESG 및 청렴윤리경영' 특강을 위해서

울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 압박에 대한 입장에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라며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기를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은 어떻게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겠다"고 답하며 임기를 마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한 위원장도 자진 사퇴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임기는 각각 내년 6월과 7월로, 1년 정도 남아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나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특정한 정치적 의

도를 갖고 한 말이 아니다. 민주당에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이 한 말씀은 일반론"이라며 갈등국면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보복'을 비롯해 여야 협치를 통한 협력적 국정 운영이 아닌 '강 대 강 대결구도'로 가겠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산자부 블랙리스트,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정부직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박상혁 의원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인사 문제와 관련해 모순된 행동들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정략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해명하기 어려운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현동 압수수색이 별 성과 없이 끝났지만, 결국 대장동을 탈탈 털다가 나오지 않으니 이제 백현동으로 넘어간다"며 "대장동으로 지난 대선 때 재미를 보고 나서 이제 또 그 버릇이 남아 백현동으로 넘어갔다. 가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압수수색만으로도 이 의원을 압박하는 데 충분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다시 재점화하는 과정도 민생보다는 뭔가 침묵 이미지, 뭔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新) 색깔론적 접근'이라며 "강 대 강 국면으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경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볼 때 이런 식의 국정 운영 전략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이런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말씀드린다"며 "저의 선의를 정략적 대결 국면으로 (악용해) 간다면 정면대응하겠다. 최순실 탄핵까지 완성시켰던 제가 이 정도 국면을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본다면 오만"이라고 경고했다.

/*백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개점휴업' 국회... 여야, 협상없이 책임 전가만 국민의힘 최고위원 추천 두고 李-安 충돌

(이준석-안철수)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진전 없어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갈등 지속

21대 하반기 국회가 여야 간 갈등으로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3주째 개점휴업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치 양보 없이 다투면서다. 협상을 해야 할 여야도 상대방에 '압박'만 하고 있다.

1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갈지 정하지 못하면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있는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놓지 않으려 한다. 법사위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 견제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원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원한다.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으로 정부·여당 입법안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여기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추진한 검찰 개혁 완성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양측이 저마다 이유로 물러서지 않고 다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합의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취하 등을 제시했지만 받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한라디오 인터뷰에서 "원 구성 협상인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사개특위 얘기가 나오는 거 자체가 이상하다.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하면 금방 끝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라는 메시지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주겠다는 약속만 지키면 나머지 상임위 배분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꾸만 다른 걸 꺼내든다"며 "이게 결국은 (민주당이 국회들) 개원을 하지 않겠다

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본다"는 말도 했다. 민주당의 요구가 원 구성 협상에 방해라는 주장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 구성 문제든 인사청문회든 여당이 야당에 양보한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단 한 건이라도 있다. 우리 국무총리인 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등 야당이 양보해서 협조해줬다. 이 정도 도와줬으면 적어도 여당이 꼭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 양보안을 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맞섰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로 21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자, 여야는 서로를 향해 책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비판을 고려, 상대측에 책임 전가하는 셈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李 대표, 국민의당 추천 후보 거부

국민의힘 최고위원 추천 후보를 두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당이 합당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한 후보 2명을 이준석 대표가 거부했고, 안 의원은 이에 반발하면서다. 두 사람은 최고위원 후보 추천 문제와 관련,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안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와 안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따라 지난 4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당 합당을 선언했다. 국민의당은 합당 합의 내용에 따라 최고위원 2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양당 간 합당 취지에 맞는 인사 추천'이라는 이유로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최고위원 후보 2명을 거부한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특히 안 의원 측이 '(국민의당에서 제시한) 추천 명단에 대해 추후 심의·평가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은, 이 대표가 전날(18일) "국민의당 출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사 2명을 추천한다고 하면 오히려 2명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는 발언을 겨냥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 측은 지난 2020년 2월 17일 시행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의 규정 부칙 제2조를 언급하며, 이 대표가 밝힌 '최고위원 정수 9명을 넘으면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잘못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부칙 2조인 최고위원회의의 구성에 관한 특례는 '이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을 4인까지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안 의원 측은 "미래통합당은 2020년 5월 22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2021년 4월 8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으므로 현재 최고위는 이 당헌 시행(2020년 2월 17일)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이므로 당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4명까지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서 합당 선언하며 합의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